

## 2017년 9월 호

- 1 인천대교 통행료 700원 인하 (2017.08.09, 국토교통부) 1p
- 2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K-City)」 2018년 완공 (2017.08.30, 국토교통부) 4p
- 3 고압가스·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추적 (2017.08.31, 국토교통부) 7p
- 4 불친절요금환불·민원총량제에 따른 법인택시 민원 40%감축 (2017.08.14, 서울특별시) 10p
- 5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에 핑크색 주행유도선 확대 (2017.08.21, 서울특별시) 13p
- 6 「불법 통학버스」 특별단속 실시 (2017.08.30, 서울특별시) 16p
- 7 택시 카드결제기에 총 5,015개 화장실 정보 제공 (2017.08.31, 서울특별시) 19p
- 8 아암대로 교통해소 위해 우회도로 임시개통 (2017.08.06, 인천광역시) 21p
- 9 인천 장애인 특장차 노후 차량 30대 교체 (2017.08.07, 인천광역시) 22p
- 10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2017.08.11, 인천광역시) 23p
- 11 2018년 전기 저상버스 시범도입·운영 실시 (2017.08.14, 인천광역시) 25p
- 12 주요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2017.08.22, 인천광역시) 26p
- 13 인천 택시발전 종합계획 수립 (2017.08.23, 인천광역시) 28p
- 14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통과 (2017.08.30, 인천광역시) 30p
- 15 인천시, 업무용 택시제 도입 (2017.08.30, 인천광역시) 31p

- 16 화성시 공장밀집지역↔수원역 잇는 따복버스 운행개시 (2017.08.17, 경 기 도) 32p
- 17 광명 따복버스 77번 운행 (2017.08.29, 경 기 도) 34p
- 18 경기도민 통근, 경기도내 '승용차' 서울은 '대중교통' 이용 (2017.08.03, 경기연구원) 36p
- 19 경기도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이용근로자 만족도 매우 높아 (2017.08.06, 경기연구원) 37p
- 20 M버스 28대에 첨단안전장치 무상 보급 (2017.08.11, 교통안전공단) 39p
- 21 첨단안전장치 장착 렌터카 보험료 할인 추진 (2017.08.17, 교통안전공단) 40p
- 22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센터 확대 운영 (2017.08.25, 교통안전공단) 42p
- 23 주요교차로 교통 환경 개선으로 교통사고 20% 감소 (2017.08.09, 도로교통공단) 45p
- 24 회전교차로 안전한 통행방법 (2017.08.29, 도로교통공단) 47p
- 25 등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시, 「동시 보행신호」 운영 (2017.08.12, 서울지방경찰청) 49p

**<참고자료>**

-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교통) (경기연구원)
-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 주요 수도권 교통정보 동향

### 인천대교 통행료 700원 인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28)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8월 15일 0시부터 700원 인하(소형차량 기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통행료는 편도·소형차량 기준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 인하될 예정이며,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으로 350원, 중형은 10,500원에서 9,400원으로 1,100원, 대형은 13,600원에서 12,200원으로 1,400원 각각 인하된다.

\* 차종구분과 차종별 통행료 세부 내역은 붙임자료2 참조

□ 2009년 10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한 인천대교는 인천 송도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해상 연륙교로서 수도권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인천공항과 영종도 지역을 편리하게 접근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를 협의해 왔으며,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통행료를 700원 인하하기로 하였다.

\* 자금재조달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

○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앞으로 22년간('17~'39, 민자법인 운영기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4,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 특히, 소형차를 이용하여 매일 왕복 출퇴근을 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약 33만원\*의 통행료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천대교 이외에도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 수원~광명,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하여 통행료 경감을 위한 자금재조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1 인천대교 노선도



(단위 : 원)

차종구분	분류기준	현행	변경	인하액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3,100	2,750	350
소형	2축차량(윤폭 279.4mm 이하) - (예)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6,200	5,500	700
중형	2축차량(윤폭 279.4mm 초과) - (예)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10,500	9,400	1,100
대형	3축차량 이상 - (예) 36인승 이상 승합차 10톤이상 대형화물차	13,600	12,200	1,400

##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K-City)」 2018년 완공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044-201-3849)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30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이하 자율주행차) 시험장((Test Bed, 이하 테스트 베드) '케이-시티(K-City, 이하 K-City)' 착공식을 개최한다.
  - 착공식에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의 자동차 제작사와 ICT업체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약 110억 원을 투입하여 자율주행차 실험을 위한 가상 도시인 'K-City'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32만㎡(11만 평) 규모로 구축한다.
  -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를 목표로 고속도로·도심·교외·주차시설 등 실제 환경을 재현하여,
  - 고속도로 요금소·나들목, 횡단보도, 건물, 지하도·터널 등 다양한 시설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을 위한 첨단 통신장비도 설치될 예정이다.
  
  - \* 5개 환경: 고속도로, 도심, 커뮤니티, 교외, 자율주차시설  
35종 시설: 톨게이트, IC·JC, 신호등,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택시정류장, 비포장도로, 철도건널목, 공사장, 포트홀, 터널, 좁은길, 4G·WAVE·Wi-Fi 등
  
- K-City에서는 각종 사고 위험 상황 등 필요한 조건을 설정하고 반복·재현실험이 가능하여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검증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 고속도로 부분을 우선 구축하고, 2018년 말까지 K-City 전체를 완공하여 민간, 학계, 스타트업 등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 날 행사 후 김현미 장관은 자율주행차의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직접 체험하기 위해 자율주행차를 시승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0년 레벨 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K-City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 \* 레벨 3: 고속도로 등 일정구역 내에서 자율주행 가능한 수준(돌발 상황 시 운전자 개입)
- 지난해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가능구간을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3차원 정밀도로지도와 정밀 GPS, 첨단도로시스템(C-ITS) 등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 또한, 올해 연말에는 판교에서 무인셔틀버스를, 그리고 내년 2월에는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실시하여 국민과의 거리를 줄여가고, 내년에는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 특히 금년 내 제도, 인프라, 시범운행 등 자율주행차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K-City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가 될 것이며, 선진국의 유사시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 “오늘 착공하는 K-City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상용화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고압가스·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추적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12)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물질의 실시간 도로운송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7년 3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8월 31일(목) 입법예고 한다.
-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항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했다. (시행령안 제21조)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 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했다.(시행규칙안 제2조의 2)

### < 감시대상 위험물질 종류 및 차량 최대적재량 >

위험물질	운송차량 최대적재량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위험물	1만 ℓ 이상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5,000kg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조)에 의한 고압가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6,000kg 이상 (가연성)
	2,000kg 이상 (독성)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의한 지정폐기물	5,000kg 이상

- 동 대상은 도로운송 비율이 높고, 사고 시 피해가 큰 위험물질에 대해 관계법령의 의무사항(운반계획서 제출, 동승의무)등을 고려하여 최대적재량 규모를 정했다.

② 또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의 기능과 관리 방법을 마련했다.(시행규칙안 제2조의 3)

- (기능) 단말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고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 (관리) 단말장치의 비정상 작동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또는 단말기 제조사 안내에 따라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했다.
- 그 밖에 단말기 장착·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③ 위험물질을 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 항목도 구체화했다.(시행규칙안 제2조의 4)

- 운송계획정보는 운전자성명, 무선이동통신연락처,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최대적재량, 운송시간, 운송경로, 휴식시간 등을 포함한다.

④ 아울러, 단말장치 장착대상 의무자에 대한 단말장치 미 장착 또는 기준 미 준수 시의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 이행시 운행중지명령을 위한 서식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시행규칙안 제2조의 5·6)

-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명령을 위한 서식 및 절차

\* 국토부장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단말기장착 및 개선명령, 차량소유자는 14일 이내 개선완료 및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따라 이행보고서 제출

- 차량의 운행중지명령을 위한 서식 및 절차

\* 국토부장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운행중지명령서 발급하고 관계기관 통보, 차량소유자는 제20호서식의 따른 운행중지표지 부착

- 입법예고 기간은 8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  
(전화: 044-201-4011, 4012, / 팩스: 044-201-5601)

## 불친절요금환불 · 민원총량제에 따른 법인택시 민원 40%감축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02-2133-2318)

- 서울시가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을 위해 '택시불친절 요금 환불제', '민원총량제' 등을 도입, 전체 택시 민원의 65%를 차지하는 법인택시 민원을 집중 관리한 결과 실제 민원 감축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인택시 민원은 개인택시에 비해 2배가량 많고, 전체 택시민원의 65%('14년 상반기 기준)를 차지한다.
- 서울시는 '14년 상반기 대비 '17년 상반기 전체 택시 민원 건수가 33.5%(4,601건) 감소한 가운데, 법인택시의 경우 40.1%(3,617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 항목별로는 '14년 상반기 민원 중 가장 많았던 승차거부가 45.3% 가, 불친절은 19.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민선 6기('14~'18년)출범 후 택시발전모델 3개 과제 18개 사업을 발표하고,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과제로 「택시민원 50% 감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불친절 요금환불제'는 승객이 직접 회사에 전화해 불만접수 후 불친절 운수종사자를 확인하고 상황 등을 설명하면 업체 자체 기준에 따라 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환불해주는 제도다. 현재 전체(254개 사)의 90%인 230개 법인택시회사가 참여중으로, 총 1,068건 민원에 대해 총 11,745,100원을 환불했다.('17.5월까지) 택시회사의 자구노력을 이끌어낸 사례다.
  - 불친절요금환불제에 참여하는 230개 법인택시 업체는 서울시가 제작·배포한 불친절요금환불 안내 정보판을 조수석 뒷머리에 부착 운행 중이다.
- '16년부터 시행한 '민원총량제'는 설정한 민원 총량을 초과한 업체에 카드결제 수수료 중단 및 택시회사 평가 반영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제도다.

□ 이 밖에도 서울시는 '법인택시업체 전담반'을 구성, 직원들이 254개 회사 현장에 일일이 나가(1인당 11개 법인택시회사 책임 배정) 전체 민원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사항을 권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 또, 택시회사별 민원건수와 총량 초과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택시부서(택시물류과)에 「택시민원 50% 감축 현황판」을 설치, 일정 민원을 초과한 회사는 경고 조치한다.

※ 서울 택시민원 증감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전체	법인택시	개인택시
'17.1~6월		9,115	5,389	3,726
'16 상반기 대비	증 감	-685	-671	-14
	증 감 률	-7.0%	-11.1%	-0.4%
'16.1~6월		9,800	6,060	3,740
'14 상반기 대비	증 감	-4,601	-3,617	-984
	증 감 률	-33.5%	-40.1%	-20.9%
'14.1~6월		13,716	9,006	4,710

※ 서울 택시민원 항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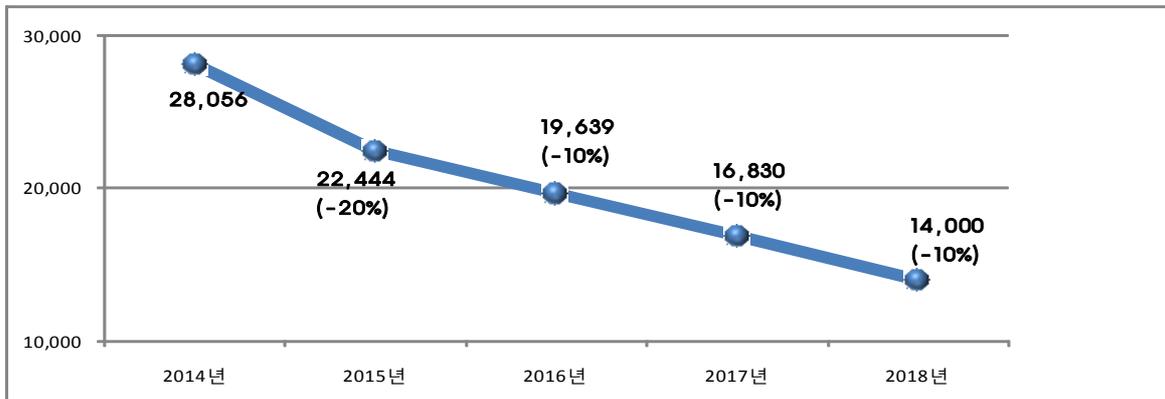
(단위 : 건수)

구 분	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장기정차	사업구역외 영업	도종하차	합승	기타
'17.1~6월	9,115	2,444	3,512	1,787	74	196	540	52	510
'16.1~6월	9,800	2,704	3,695	1,884	96	311	527	54	529
증 감	-685	-260	-183	-97	-22	-115	-13	-2	-19
증감률	-7.0%	-9.6%	-5.0%	-5.1%	-22.9%	-36.9%	-2.5%	-3.7%	-3.6%
'14.1~6월	13,716	4,469	4,354	2,522	422	543	673	85	648
증 감	-4,601	-2,025	-842	-735	-348	-347	-133	-33	-138
증감률	-33.5%	-45.3%	-19.3%	-29.1%	-82.5%	-63.9%	-19.8%	-38.8%	-21.3%

□ 서울시는 이러한 민원 감소효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택시 불편은 여전히 많은 만큼, 앞으로도 택시 민원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해 '18년에는 '14년 신고건수 대비 50%까지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16년 서울시에 접수된 교통불편민원 중 승차거부 등 택시불편민원은 62%(총 33,626건 중 20,954건)를 차지했다.
- '1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 총 2만 8천여 건을 기준으로, '15년 20%, '16~'18년 매년 10% 씩 줄여 '18년에는 50% 감소한 1만4천 건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다.

※ 택시불편민원 연도별 감축 목표



- 이를 위해 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등 택시 불편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DB화,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방식을 다양화해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택시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택시 업체 서비스 평가기준 중 '민원관리' 지표의 배점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한편, 계속해서 민원이 다발하는 택시회사에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중단 등 패널티를 주고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이 택시를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인식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민원’이므로 민원 감축이 곧 서비스 개선이라 여기고 택시업계와 시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에 핑크색 주행유도선 확대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02-2133-2466)

- 서울시는 교차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6년 시범 설치한 주행유도선(분홍선)을 오는 9월부터 20개소에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 주행유도선은 주행방향을 혼동하기 쉬운 비정형교차로나 주행방향이 여러 갈래인 교차로에서 주행궤적을 안내하여 초행길이나 초보운전자도 보다 쉽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고속도로 진·출입구에 설치된 주행유도선 개선 효과(교통사고 40% 감소) 등 국내 설치 사례를 근거\*로 '16년 서울시는 3개 교차로(▲영등포로터리 ▲이수교차로 ▲녹사평역교차로)에 분홍색 주행유도선을 시범 설치하였다.
- \*출처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차로유도선 개선방안』 (2014. 4)
- 시에 따르면 주행유도선 시범설치 이후 교차로 진입 전에 경로에 맞는 차로로 미리 이동하여, 교차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급차로 변경이 20% 이상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 측면의 개선효과가 확인됐다.

(기간 : '16.06~'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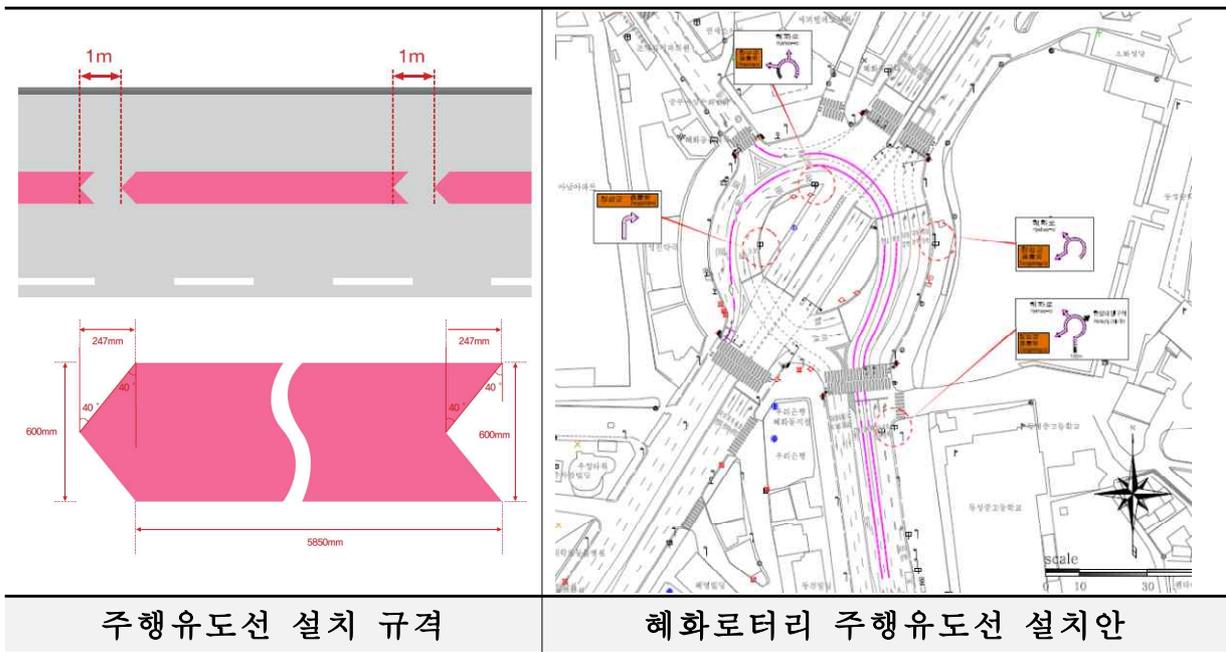
기 준 (3개소)	정지선 40m 이전 차로변경			교차로 내부 차로변경		
	사 전	사 후	증 감	사 전	사 후	증 감
평 균	166건/개소	271건/개소	63%	531건/개소	420건/개소	-21%
합 계	499건	814건		1,594건	1,260건	

- 이에 주행유도선 확대설치를 위하여 비정형교차로 등 주행방향을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전수조사 하였고, 현장점검을 통해 혜화로터리 등 20개소(붙임)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 자치구 및 경찰서와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를 파악하여 62개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교통안전측면 지표(급차로 변경에 따른 상충, 차량유도선(점선) 이탈, 차량 간 급제동 및 경적)를 조사, 설치 타당성 평가를 위한 3개월간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이 중 교통안전측면 지표가 19.8% (전수조사 대상지 평가지표 평균, 100대 통과교통량 중 약 20회 발생) 이상으로 나타난 혜화로터리 등 20개소를 선정했다.



- 시는 주행유도선의 색상, 규격 등 설치 방법을 '16년도에 자체 수립한 기준과 동일하게 설치하여 시설물에 대한 운전자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향후 시는 설치 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량적 효과 분석을 거쳐 '18년 설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주행유도선의 시설물 정의 및 설치기준 연구 결과에 따라 서울시 운영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 서울시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은 “2017년 주행유도선 확대 설치를 통해 서울시 교통의 안전을 보다 확보하고, 초보운전자와 초행길 운전자도 보다 쉽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2017년 주행유도선 확대 설치 대상지

구분	대상지	주 소	자치구
1	미아사거리	강북구 미아동 14-2	강북구
2	잠실대교북단 진입램프	광진구 자양동 743-1	광진구
3	떡전교 사거리	동대문구 청량리동 2-3	동대문구
4	신동아쇼핑 교차로	용산구 서빙고동 271-105	용산구
5	혜화동로터리	종로구 혜화동 56	종로구
6	명동성당 교차로	중구 저동1가 42	중구
7	승례문 교차로	중구 남대문로4가 24	중구
8	수서IC 진출램프	강남구 수서동 729	강남구
9	김포공항입구 교차로	강서구 방화동 624-2	강서구
10	양화교 교차로 (나이아가라호텔)	강서구 염창동 284-81	강서구
11	관악IC 진출램프 (신림중)	관악구 신림동 808-123	관악구
12	신림119안전센터 교차로	관악구 신림동 808-152	관악구
13	고척스카이돔 앞 교차로 (고척교)	구로구 고척동 63-3	구로구
14	신도림교 교차로 (신도림역교차로)	구로구 구로동 1-25	구로구
15	오금교 교차로	구로구 신도림동 286-11	구로구
16	상도역 교차로	동작구 상도1동 676-3	동작구
17	선암IC 교차로	서초구 우면동 420-2	서초구
18	목동동로 이마트사거리	양천구 목동 406-421	양천구
19	목동오거리 (목동역교차로)	양천구 목동 926-3	양천구
20	월드컵파크7단지 교차로	마포구 상암동 868-1	마포구

## 「불법 통학버스」 특별단속 실시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02-2133-4581)

- 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9월부터 자가용 승합자동차로 중·고등학교 통학생을 유상운송하는 일명 ‘불법 통학버스’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통학생을 모집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통학비용을 받고 자가용자동차로 불법유상운송하는 행위이다.
- 불법 통학버스를 특별 단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용학생들의 안전 문제이다. 지난 3년간 적발된 93건의 불법통학버스 중 90%가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인데다,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소유 자가용자동차였다.
  - 자가용자동차도 ‘유상운송특약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일반차량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5~3배 수준으로 높다. 대부분 영세업자인 소유주들의 가입률이 일반보험에 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 정상적인 통학버스는 적법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교장과 계약을 맺고 운행을 하고 있으나 불법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는 스스로 통학생을 모집하여 개인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는 사업용이 아닌 개인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불법 통학버스’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해당 학교 및 학부모에게 불법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 자가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 적발현황

연 도	계	적발된 차량 연식			
		2000년 이전	2001년~2005년	2006년~2010년	2011년 이후
계	93	11	68	11	4
2017년. 7월	11	1	9	1	-
2016년	38	4	30	2	2
2015년	44	6	29	8	2

그 결과 불법영업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통학하는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정문에서 100~200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 학생을 하차시키거나, 불법영업행위를 피하기 위해 기사가 학부모 및 통학학생에게 진술거부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시는 적발된 차량을 해당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계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 시 단속공무원은 통학시간대에 현장에서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운행하는 승합자동차를 조사하고 즉시 적발할 계획이다.

○ 자가용유상행위는 처벌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여 통학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많은 학생들이 탑승하는 통학용버스는 사고 발생 시에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학부모께서는 불편하더라도 합법적인 자동차 또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는 불법 행위들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학생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합법과 불법의 구분방법〉

구 분		설 명
합 법	학 원 ( 학 원 장 ) 소 속 차 량	학원(학원장)소유의 자가용으로 학원에 다니는 학생에 한정하여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운행되는 자동차
	전 세 버 스	통학목적으로 학교의 장 또는 학부모 대표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운행하는 전세버스
불 법	개인 유상운송 차량	자가용자동차(승합차)로서 자가용 소유주와 학원장의 계약에 의해서 유상으로 운행되는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승합차)로서 자가용 소유주와 이용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와 계약에 의해서 유상으로 운행되는 자동차
	전 세 버 스	사업용자동차로서 학생 또는 학부모를 운송계약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전세버스

〈자가용승합차의 통학용 유상운송행위 및 처벌내용〉

구 분	유 상 운 송 행 위	처 벌 내 용
자가용승합차 유상운송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자가용승합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행위	6개월 이내 자동차 운행정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전세버스	사업용자동차로서 운송사업자가 이용하는 학생 및 학부모와 정상적인 운송계약을 맺지 않고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개별수수)	과징금 18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 택시 카드결제기에 총 5,015개 화장실 정보 제공

(서울시 택시물류과, 02-2133-2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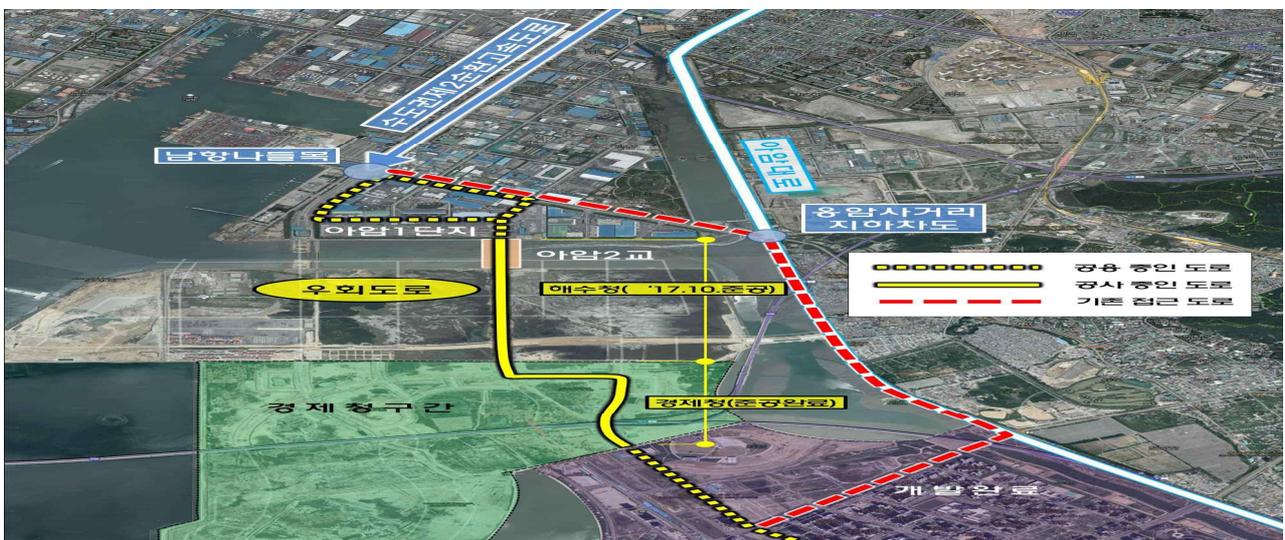
- 서울시에서 민간의 기술과 공공기여를 활용해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고충인 화장실 이용 불편해소에 나섰다. 택시 카드결제기 화면에서 터치 한번으로 손쉽게 주변 공중·개방화장실 검색이 가능해지고, 서울시내 400여개 주유소 화장실 용품지원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 서울시에서 지난 4월 택시기사 3,109명을 대상으로 화장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택시운행 중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경험한 적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7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이 중 35%는 인근 화장실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화장실을 찾는 방법으로 화장실 안내 앱(3.3%)이나 인터넷 검색(0.5%)을 이용하는 비율은 극히 소수였다.
  
- 택시운행 중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로는 89%가 주유소를 꼽았지만 공중화장실로 분류되는 주유소화장실도 LPG를 사용하는 택시의 특성상, 주유없이 화장실만 이용 시 눈치(78%)가 보이거나,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이용자체를 거절(62%)당한 적이 있을 정도로 택시기사와 주유소 간의 화장실 이용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서울시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서울 어디서든 인근의 공중·개방화장실을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카드결제기에 화장실 정보 제공 기능을 추가하고, 주유소 화장실 용품 지원으로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할 방침이다.
  
-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손잡고 택시 카드결제기에 서울시내 5,015개 화장실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 제공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터치 한 번으로 현재 내 위치 주변의 화장실을 찾을 수 있다. 8월 23일부터 법인택시 1개사에서 시험가동 중이며, 9월 중순부터 서울시 전체 택시에 단계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 주유소 화장실 용품 지원은 택시승차대를 위탁 관리하는 제이씨데코 코리아로부터 공공기여금을 제공받아 한국주유소협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31일 서울시와 한국주유소협회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서울시내 400여개 주유소에 화장실 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주유소화장실이 공중 화장실로서의 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이를 통해 화장실 이용 시 주·정차 곤란(76%), 심야 화장실 미 개방(77%) 등의 주요 고충사유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를 한 달에 한번 직접 운전을 하면서 택시 기사들이 화장실 이용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몸소 체험했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택시기사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민관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아암대로 교통해소 위해 우회도로 임시개통

(인천광역시 도로과, 032-440-3772)

- 인천시가 아암대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남항나들목)에서 아암물류1단지, 송도9공구(아암물류2단지), 송도6·8공구를 경유하는 우회도로를 임시로 개통한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지방해수청, 중구청, 인천지방경찰청, 인천항만공사 등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통시설물(신호등, 차선 등)설치 및 현장정리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오는 8월 17일 우회도로 개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임시 개통되는 우회도로를 통한 송도기존시가지로의 진·출입은 소형자동차와 6,8,9공구 공사 관계차량에 한해 허용된다. 대형컨테이너 화물차량(세미트레일러) 등은 현행대로 아암대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 그동안 아암대로는 지난 3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후 교통량 유입으로 교통정체가 악화되었고 용암사거리 지하차도건설 등으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어 시민의 불편이 컸었다.
- 인천시는 오는 10일 용암사거리 지하차도 개통과 더불어 아암대로 우회도로가 임시 개통하게 되면 아암대로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시민 불편이 감소되는 한편 송도국제도시에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이용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인천 장애인 특장차 노후 차량 30대 교체

(인천광역시 택시화물과, 032-440-3802)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후차량 30대를 휠체어 리프트 장착 신차로 교체 구입하고, 8월 현장에 배치해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인천시에서는 지난 2006년 6월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한 이래 특장차량 140대(법정대수 100%)와 바우처택시 120대를 24시간 운영하여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발이 되고 있다. 이번 신차구입을 통해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탑승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이번에 구입한 차량을 2018년 3월 개최되는 평창 패럴림픽 기간 중 외국 선수단 수송에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어 인천시의 위상과 명성이 대외적으로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특장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비지원 등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 증차 협의는 물론, 교통약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개 분야 10개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은 시스템, 차량, 수송, 고객서비스, 기타 5개 분야이다. 10대 개선과제로는 그동안 대기시간 지연과 2시간 예약제로 인한 불편 개선을 위한 바로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쾌적한 탑승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노후 차량 일부를 교체할 예정이다.
- 또한 휠체어와 비휠체어 탑승객을 구분한 맞춤형 수송체계 구축, 바우처택시 운행지역의 인천 전역 확대, 고객 간 소통간담회 실시, 정신고통에 시달리는 상담원 근무여건 개선 등 이용자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이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인천광역시 철도과, 032-440-3893)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7년 8월 11일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 제 2차관) 회의결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에 대하여 2017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인천 ~ 서울 간 교통 혼잡 및 1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 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직·간접비용 손실 최소화를 위해 철도를 통한 획기적인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3년여 간의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4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B/C 0.33)한 것으로 판정되어 노선 재선정, 운영계획 재검토 등 사업타당성을 재기획하여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였으나 이용수요에 대한 불확실, 국가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2017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미선정되어 사업추진의 좌초위기를 맞기도 했었다
- 이에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상호 적극 협력하여 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해 기존 송도에서 청량리까지의 노선을 경기도 마석까지 연장(L=80.08km)하는 노선을 재기획하여 수도권 동북부 수요를 흡수시키는 등 사업의 편익을 높임으로서 이용수요를 극대화하고, 기존선 활용, 사업비 절감 방안 등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 중앙정부(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설득하여 2017년 8월 11일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 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20분대 출·퇴근으로 교통주권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졌으며 내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각종 절차를 거쳐 2025년 개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2018년 전기 저상버스 시범도입 · 운영 실시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032-440-3984)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래자동차인 전기 저상버스를 2018년 상반기에 시범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현실에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감축으로 저탄소 청정도시를 만들어 기후변화대응 선진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예산 절감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에 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에 투입되고 있는 차령 만료 및 대폐차를 전기버스로 전환하여 가장 효율적인 노선중 2개 노선, 20대를 시범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제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인 전기버스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중·장기적으로 확대 도입하기로 하였다.
- 전기 버스는 기존의 내연기관 버스에 비해 소음이 없고, 연료비나 유지 보수비용이 저렴하여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차량가격이 고가이고 한번 충전 시 주행거리가 짧고 배터리교체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으나, 지속적인 확대 보급이 되어 보편화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되고 시 재정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기버스의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 전기버스 시장이 활짝 열릴 분위기이지만, 기대만큼 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싼 가격 문제를 해결할 사항으로 인천시는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관련부처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수시 방문 협의, 충전요금 최소화 방안을 위한 한전과의 협의, 버스운송업체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확대 도입을 위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 문제 등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과 성능이 향상된 전기버스가 시내버스로 정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주요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 032-440-3902)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출·퇴근길을 제공하기 위해 8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주요 간선도로 38개 특별관리 지역을 선정하여 인천시와 지방경찰청 및 구와 경찰서간 상호 협조 하에 실시된다.

※ 2017. 하반기 개학기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점검기간 ('17.8.28.~9.22.) 별도 운영

- 인천시의 이번 단속은 급속한 도시 성장과 자동차의 증가로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만연하나 부족한 단속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출·퇴근 길 대중교통인 버스와 승용차 등의 현저한 속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주요 간선도로 중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통체증 유발 및 불법 주정차 민원 다수 지역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 자동차 증가대수

- 연간 : 총 77,907대[1,482,505대('17.7월말 등록)-1,404,598대('16.7월말 등록)]
- 월간 : 총 8,185대[1,482,505대('17.7월말 등록)-1,474,320대('17.6월말 등록)]

- 단속 시간은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다. 단속 구간으로는 인천시내 주요 간선도로 중 38개 특별관리지역 32km에 해당된다. 단속인원 총 45개 반 111명(시 및 구 20개 반 53명, 경찰청 및 경찰서 25개 반 58명)을 투입하여 인천시와 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청은 교통질서 유지로 특별관리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에 책임을 진다.

-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특별관리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 교차로 및 도로 모퉁이 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 기타 아파트 및 상가 공사로 교통에 방해하고 있는 공사 차량 등 교통체증 유발 및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 시 관계자는 “인천시 주요 간선도로 특별관리지역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으로 대중교통인 버스와 승용차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출·퇴근길을 제공하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인천 택시발전 종합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택시화물과, 032-440-3802)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에게는 행복을, 운송자에게는 감동을 주는 고품격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인천 택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 인천의 택시환경과 여건은 우버(Uber), 뷁시(Buxi) 택시, 카셰어링, BRT 등 신교통 출현으로 택시시장 수요와 영역이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상태다.
- 또한, 낮은 소득, 열악한 근무여건, 이직률 증가와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법인택시의 경우 80%가 50대 이상), Mobile App과 결합해 신속, 편리한 형태로 소비자의 트렌드도 급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은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 연령별 분포

연령별	30대이하	30~40대	40~50대	50~60대	60~70대	70세이상
6,179	8	149	1,125	3,150	1,625	122
100%	0.1%	2.4%	18.2%	51.0%	26.3%	2.0%

- 인천시는 이러한 택시업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품격 택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택시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천형 택시발전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 이번 종합계획 수립은 택시업계와 택시노조에서 수차례 정책 건의됐던 과제로 그동안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토되지 못했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인천의 재정건전화의 노력과 결실을 시민행복과 시민의 발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함으로써 택시산업발전과 택시영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 고품격 서비스 구현을 위한 택시발전 종합계획은 6개 분야 37개 세부과제의 전략적 추진(신규사업 22, 확대사업 3, 지속사업 12)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기 31건, 중기 4건, 장기 2건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으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5개 과제, 대시민 서비스 향상 9개 과제,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4개 과제,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계지원 9개 과제, 불법행위 근절 및 안전교육 4개 과제, 소통·공감 행정구현 6개 과제 등이다.
- 인천시는 그동안 택시 친절도 향상을 위한 씩씩 스마일 택시 시책을 추진한 결과 불편민원이 전년도 대비 2.8%가 감소한 3,942건으로 나타났다.
- 또한 법인택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892백만원 투입하여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유가보조금 25,910백만원, 카드수수료 2,718백만원, 통신료 779백만원, 콜비 1,546백만원 등 총 30,953백만원을 지원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계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택시 서비스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 관리시스템 정착으로 택시 선진화 추진과 택시 고객 만족도 향상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통과

(인천광역시 철도과, 032-440-3914)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이하‘기본계획 변경안’)이 8월 30일 인천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원안 가결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사업’은 검단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규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인천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7,277억원을 투입해 인천1호선 계양역과 검단신도시를 직결하는 것으로, 정거장 3개소를 포함한 연장 6.9km 건설하는 사업이다.
- 인천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 제242회 정례회에서 ‘원당역 복원 청원’을 반영한 총사업비 분담 방안 우선 확정을 사유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보류한 바 있었다.
- 이에 인천시는 지난 8월23일 인천시와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LH, 인천도시공사)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가결된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그동안 의회 청원 및 공청회 때 제시의견과 총사업비 분담 방안 확정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최강환 교통국장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건설사업비 분담 방안과, 원당역 복원 청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만큼 9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올해 안에 승인·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등 202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검단신도시의 조기 활성화 및 심각한 인천 서북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시, 업무용 택시제 도입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032-440-3857)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직원 관내출장 시 택시이용을 도입하고, 9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업무용 택시제’는 직원 출장 등 공무 수행 시 부족한 관용차량 대신하여 택시를 이용토록 하는 제도로 직원이 이용한 택시의 요금에 대해 업무택시 전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제도이다.
- 시범운영 기간 전인 8월 30일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업무용 택시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하며, 택시기사와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운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 이번에 도입되는 업무용 택시는 인천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택시가 이용 가능하며, 시 본청 직원 및 방문 민원의 편의를 위해 시청사 내에 택시 승차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 인천시는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시 본청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실적 등의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 후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현재 관용차량 사용은 유지관리에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리를 위한 직원들의 추가 업무가 필요해 전국적으로 줄여 나가는 추세이다. 인천시는 이번 업무용 택시 도입으로 관용차량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 경영난의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업무용 택시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택시업계 수요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 중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잘된 점은 살리고 고칠 부분은 개선하여 ‘인천형 업무용 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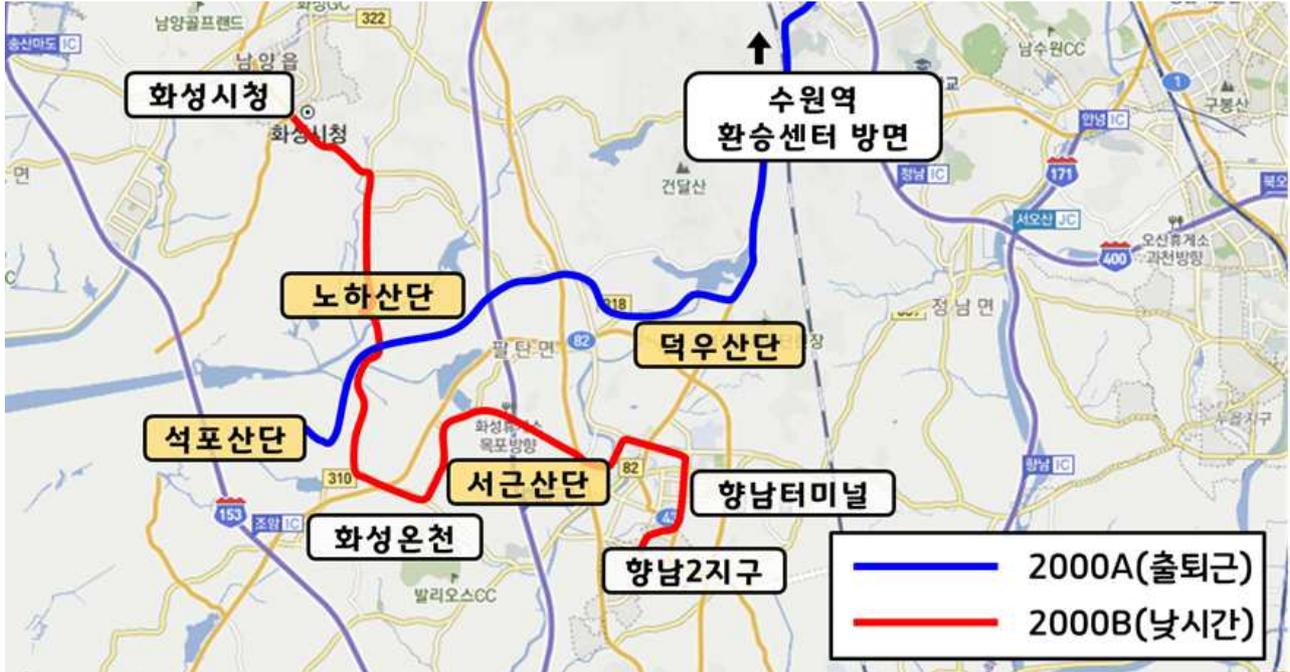
## □ 화성시 공장밀집지역↔수원역 있는 따복버스 운행개시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 031-8030-3626)

- 교통취약 지역 해결을 위한, 맞춤형 따복버스가 화성에서도 달린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석포·노하·덕우공단 등 화성지역 공장밀집지역과 수원역 환승센터를 오가는 맞춤형 따복버스 2000번(A·B)을 8월 18일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하고, 9월 중 확대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통되는 따복버스 2000번은 A와 B노선으로 구성되며, 2000A는 출퇴근 시간대 수원역과 화성 공장밀집지역을, 2000B는 낮 시간대 화성시청과 화성 공장밀집지역, 향남1·2신도시를 오고간다.
- 먼저 ‘2000A’는 석포공단, 노하공단, 덕우공단 근로자들의 통근편의를 위해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에 운행한다. 운행구간은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출발해 고색사거리, 봉담읍을 거쳐 화성 공장밀집지역까지다. 운행시간은 수원역 환승센터 출퇴근시간에 각 3회씩 운행한다. 단, 8월에는 1회로 시범운행 후 9월 이후 차량을 증차하여 정상운행 할 예정이다.
- ‘2000B’는 낮 시간대 화성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화성시청에서 출발해 석포공단, 서근산단, 팔탄공단을 거쳐 향남1·2신도시까지 운행하게 된다. 단, 8월에는 5회로 시범운행 후 9월 이후 차량을 증차하여 정상운행 할 예정이다.
-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따복버스 개통으로 산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및 화성시청 방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따복버스 노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따복버스는 지난 2015년 파주 77번 노선을 시작으로 이번 화성까지 포함하면 10개 시군에서 17개 노선이 운행되며, 올해 말까지 12개 시군 20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될 예정이다.
- 화성지역 따복버스의 상세 노선 정보는 경기버스정보([gbis.go.kr](http://gbis.go.kr))에서 검색·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 대중교통과(031-369-317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참고 1 화성시 따복버스 노선도



## 참고 2 화성시 주요 산업단지(공장밀집지역) 현황

- 석포산업단지(장안 첨단1일반산업단지)
  - 위치 : 화성시 장안면 일원
  - 주요업종 : 식료품, 섬유제품, 화학제품, 의료기기, 전기장비 등
  - 근무인원 : 약 1만5천여 명 근무
  
- 덕우산업단지(동방일반산업단지)
  - 위치 : 화성시 팔탄면 일원
  - 주요업종 : 식료품, 인쇄, 화학제품, 1차금속제조, 전자부품 등
  - 근무인원 : 약 2만여 명 근무

## 광명 따복버스 77번 운행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 031-8030-3626)

- 경기도 교통취약 지역 해결사, 맞춤형 따복버스가 9월 1일 첫차부터 광명에서도 달린다.
- 이번에 운행되는 따복버스 77번은 광명시 남북거점과 경기도내 대표관광지인 광명동굴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A와 B노선으로 구성된다. 77A는 출근시간대 KTX 광명역과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연계하며, 77B는 77A노선에서 광명동굴까지 연장한 노선으로 출근이후 시간대를 운행한다.
- 77A는 원거리통학 고교생 및 KTX광명역 접근편의를 위해 차고지 기준 출근시간(06시~08시30분)에 30분 간격으로 옥길동차고지에서 출발해 광명사거리역(7호선), 밤일마을, 가리대사거리, 이케아·롯데아울렛을 거쳐 KTX광명역까지 운행한다.
- 77B는 광명동굴을 방문하는 이용객을 위해 77A노선에서 광명동굴까지 연장한 노선으로 차고지 기준 낮 시간 및 퇴근시간대(09시~23시) 30~4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 그간 광명시 고교 평준화 시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과 밤일마을 단독주택단지, 밤일음식문화거리의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광명동굴 진입로의 경우 자가용 방문객으로 인한 주차난과 교통 혼잡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따복버스 개통으로 원거리 통학생, 밤일마을 주민, 광명동굴 방문객의 교통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따복버스 노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경기도는 광명시와 9월 1일 오후 2시 광명동굴 주차장에서 광명시장,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 따복버스 개통식’을 가질 예정이다.

- 따복버스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이번 광명까지 포함하면 11개 시군에서 18개 노선이 운행되며, 올해 말까지 12개 시군 20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될 예정이다.
  
- 광명지역 따복버스의 상세 노선 정보는 경기버스정보([gbis.go.kr](http://gbis.go.kr))에서 검색·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명시 첨단도시교통과(02-2680-2579), 화영운수(02-2687-003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 경기도민 통근 경기도내 승용차 서울은 대중교통 이용

(경기연구원, 031-250-3132)

- 경기도민은 경기도내 통근 시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며 (거주지: 38.4%, 도내 타시·군: 63.9%) 서울로 통근 시에는 대중교통(62.1%)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연구원이 3일 낸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VI : 교통’ 보고서에 따르면 통근목적지별 이용하는 교통수단 비율이 다른데 걸리는 시간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거주지로 통근 시에는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오래 걸리고(버스: 28분, 지하철: 31분 > 승용차 25분), 서울로 통근할 때는 승용차가 대중교통보다 오래 걸렸다(승용차: 66분 > 버스: 64분, 지하철: 61분).
- 경기도민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통근시간은 평균 26.4분이라 답했는데 거주 지역으로는 24.6분, 도내 다른 시·군으로 44.2분, 서울로는 64.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통근시간은 짧아지는데 통근시간이 평균 60분 이상 걸리는 서울로의 통근은 20대에서는 41.3%였으나, 50대에서는 21.4% 비율로 떨어졌다.
-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교통의 문제점으로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횟수 부족(30.6%)’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주차공간 부족(23.3%)’, ‘교통법규 미준수(15.9%)’, ‘교통체증(15.6%)’, ‘교통안전시설 부족(13.8%)’순 이었다.
- 빈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내 통근 시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시·군간 버스나 지하철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시·군간 환승허브역을 발굴, 연계하는 등 대중교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당분간 경기도내 통근의 승용차 이용이 지속되므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과 경기도차원의 주차정책 수립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빈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와 서울간의 광역통행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내 통근자가 전체의 69.2%인 만큼 경기도 지역 간 이동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정책과 지속적인 도시공간 정비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 □ 경기도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이용근로자 만족도 매우 높아

(경기연구원, 031-250-3157)

- 경기도내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공동통근버스 만족도가 4.17점(5점 만점)으로 이용자들이 만족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6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의 만족도는 안산시가 4.47점으로 가장 높고, 시흥시 4.34점, 파주시 3.95점으로 나타났다.
- 항목별 만족도는 쾌적성 부문에서 4.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안전성 4.62점, 운행서비스 4.38점, 운행정보 제공 4.09점으로 조사됐다.
- 중요도/만족도(IPA)분석 결과, 운행서비스가 중점개선펙목으로 나타났으며, 운행서비스의 세부항목으로는 '운영횟수 증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기도내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통근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 경기도는 3개 시(시흥시, 파주시, 안산시)의 4개 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시흥MTV, 파주출판문화단지, 안산스마트허브)에 공동통근버스를 운행 중에 있다.
- 경기도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의 수는 27대이며, 하루 77회(출근 37회, 퇴근 40회), 1,141명(출근 676명, 퇴근 465명)을 수송한다.
- 공동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교통비 절감액은 연간 3.54억원, 통행시간 감소 편익은 연간 1.9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로자 인당으로 환산하면 교통비 절감액은 48만 5천원이고, 출근 통행시간은 평균 13분 단축되는 것이다.

- 김채만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동통근버스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공동통근버스 정보제공서비스와 공동통근버스 운행관리 시스템구축 ▲경기도 공동통근버스 디자인의 표준화(브랜드화)를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 ▲공동통근버스 노선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노선타입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 김 연구위원은 “현재 공동통근버스는 ‘운행정보 안내지’를 통해 정적이고, 일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편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운행정보, 차량운행관리, 탑승객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M버스 28대에 첨단안전장치 무상 보급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처, 054-459-7233)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8월 11일(금) 경기고속 영통차고지(경기도 수원시 소재)에서 M버스 28대에 전방충돌경고장치(FCW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을 운행하는 M버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공단은 이날 무상지원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수도권 M버스 전체 400대에 전방충돌경고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공단에 따르면, M버스는 시내버스와 비교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운행거리가 길고, 운행 중 주행속도가 높기 때문이다.
- 공단은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첨단안전장치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및 경찰과 함께 운수업체 안전관리와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 공단이 자체 개발한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운수업체의 위험수준을 점검하고, 지자체 및 경찰과 함께 ‘피로운전 단속기’를 기반으로 화물차와 버스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준수여부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앞으로도 첨단안전장치의 적극적인 개발과 보급 확대를 통해 교통수단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첨단안전장치 장착 렌터카 보험료 할인 추진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처, 054-459-7233)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8월 17일(목)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황해선)과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카셰어링' 이용 확산과 렌터카 등록대수 증가 등에 따른 렌터카 교통사고 위험요인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 실제로, 지난해 렌터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8,034건이 발생했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106명으로 사업용자동차 사망자의 12.4%를 차지했다.
- 공단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렌터카 교통안전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확산', '운전자 위험요인 관리', '렌터카 안전 연구·교육' 등의 입체적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 먼저,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입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전방충돌경고장치(FCWS)를 장착하는 렌터카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 할인율과 시행시기, 대상 차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끝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 운전자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할 방침이다.
  - 렌터카에 DTG를 장착해 렌터카 이용자의 과속이나 급감속 등 위험운전 여부를 사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정부의 효과적인 렌터카 안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도 강화한다.
  - 렌터카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젊은 층과 초보 운전자 관리 방안, 카셰어링 안전성 강화 등 사고 취약요인에 집중할 계획이다.

-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렌터카 등록대수 증가, 카셰어링 산업 성장 등으로 인해 렌터카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며,
-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단과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함께 안전한 렌터카 이용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센터 확대 운영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처, 054-459-7241)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8월 28일(금)부터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공단은 지난 6월부터 전국 18개 지점에서 무상점검센터를 운영해왔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서 25개 지점(고속도로 휴게소 10개소, 화물터미널 등 15개소)으로 확대한다.(\* 별첨 :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센터 장소)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 공단은 운영 중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올해 말까지로 운영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 운영기간 중 무상점검센터를 방문하면 누구나 운행기록장치를 점검받을 수 있다.
  - 전원불량이나 기초정보 미입력, 고정상태 불량 등은 무상으로 즉시 수리가 가능하다.
    - 단, 배선불량, 기기고장, GPS안테나 불량 등 부품 교체가 필요한 작업은 부품구매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운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자료의 시스템 제출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 한편,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8일부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최소휴게시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공단은 지난 4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피로운전 현장 단속기’를 개발했다.
    - 공단은 무상점검센터 확대 운영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오작동을 최소화하여 피로운전 현장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공단 오염태 이사장은 “버스나 화물자동차는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개발과 제도개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확대 운영 장소**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DTG) 점검센터 운영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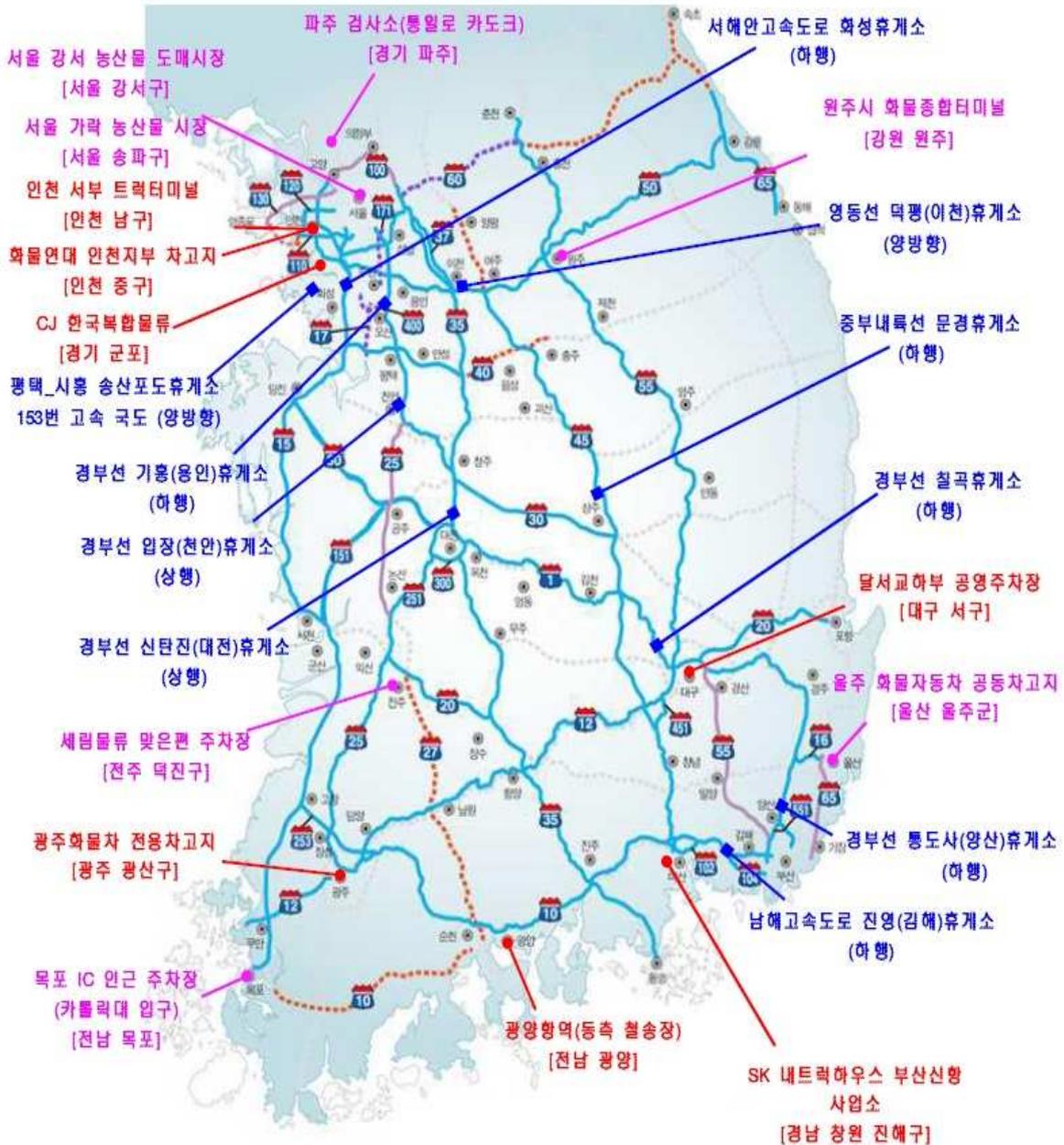
○ 고속도로 휴게소(10개소)

No.	고속도로	장소	주소	비고
1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하행)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300-3	
2		입장휴게소(상행)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산리 362-2	
3		신탄진휴게소(상행)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52-8	
4		칠곡휴게소(하행)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319-1	
5		통도사휴게소(하행)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89-5	
6	중부내륙선	문경휴게소(마산방향)	경북 문경시 유곡동 460-10	
7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부산방향)	경남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415	
8	평택_시흥고속도로	송산포도휴게소(양방향)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349-26	
9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양방향)	경기도 이천시 미장면 각평리 산 22-1	
10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	경기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산 102-1	

○ 화물터미널 등(15개소, 30명)

No.	장소	주소	비고
1	SK 내트럭하우스	제주시 도림1동 574-1	
2	CJ 한국복합물류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231	
3	인천서해로 노상주차장(인천화물연대 쉼터)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8	
4	달서구 하부 공영주차장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23-3	
5	광주 진곡화물공영차고지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837	
6	광양항역 입구 주차장	전남 광양시 도이동 777	
7	원주시 화물종합터미널	강원 원주시 현충로 131-6 태장동	
8	인천 서부 트럭터미널	인천시 남구 도화동 957번지	
9	전주 세림물류 맞은편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38-10	
10	경기 파주 검사소(통일로 카도크)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81-1	
11	목포C 인근 주차장(목포 기톨릭대 입구)	전남 목포시 석현동 919-4	
12	울주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양면 덕하로 33	
13	서울 가락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14	서울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	
15	SK 내 트럭하우스 부산신항 사업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 북로320	

##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25개소) 현황 [2017.8월말]



문의(점검센터 고객센터)  
1566-3462

## □ 주요교차로 교통 환경 개선으로 교통사고 20% 감소

(도로교통공단, 033-749-5212)

- 상가와 아파트 밀집지역 등 시민들의 생활이 밀접한 교차로의 신호체계와 교통 안전시설물을 개선한 결과, 교통사고가 20% 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다.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정순도)은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함께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의 일환으로 지난 상반기에 전국 생활권 주요교차로 40곳을 대상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상반기 동안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가, 아파트 밀집지역 등 생활권 주요교차로에서 특정시간대 정체 및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전국 40개소 교차로의 신호체계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 그 결과 생활권 교차로 주변의 차량 속도는 14.5% 증가 (28.2km/h→32.3km/h) 되고, 지체시간은 15.9% 감소 (86.8초/km→73.0초/km) 하는 개선효과를 가져왔다.
  - 특히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87억원의 운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간비용과 경비용을 포함할 경우 연간 1,347억원의 총 혼잡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도로교통공단은 교차로에서의 정체 및 사고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공단에서 자체 개발한 최첨단 장비인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이용하여 도로구조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밀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다.
- \* 차량에 장착된 첨단센서와 계측장치를 이용하여 교통통제 없이 도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차량
- 첨단 교통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한 신호운영체계 분석을 통해 신호주기 및 신호시간 등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교차로를 개선하였으며

○ 이를 통한 개선 결과를 교통사고 예측프로그램(SSAM)\*으로 분석한 결과, 약 20%의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 미국 연방도로관리청(FHWA)에서 개발된 모형으로, 교통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도로에서의 차량 상충을 분석하여 교통안전성을 측정하는 대리안전 척도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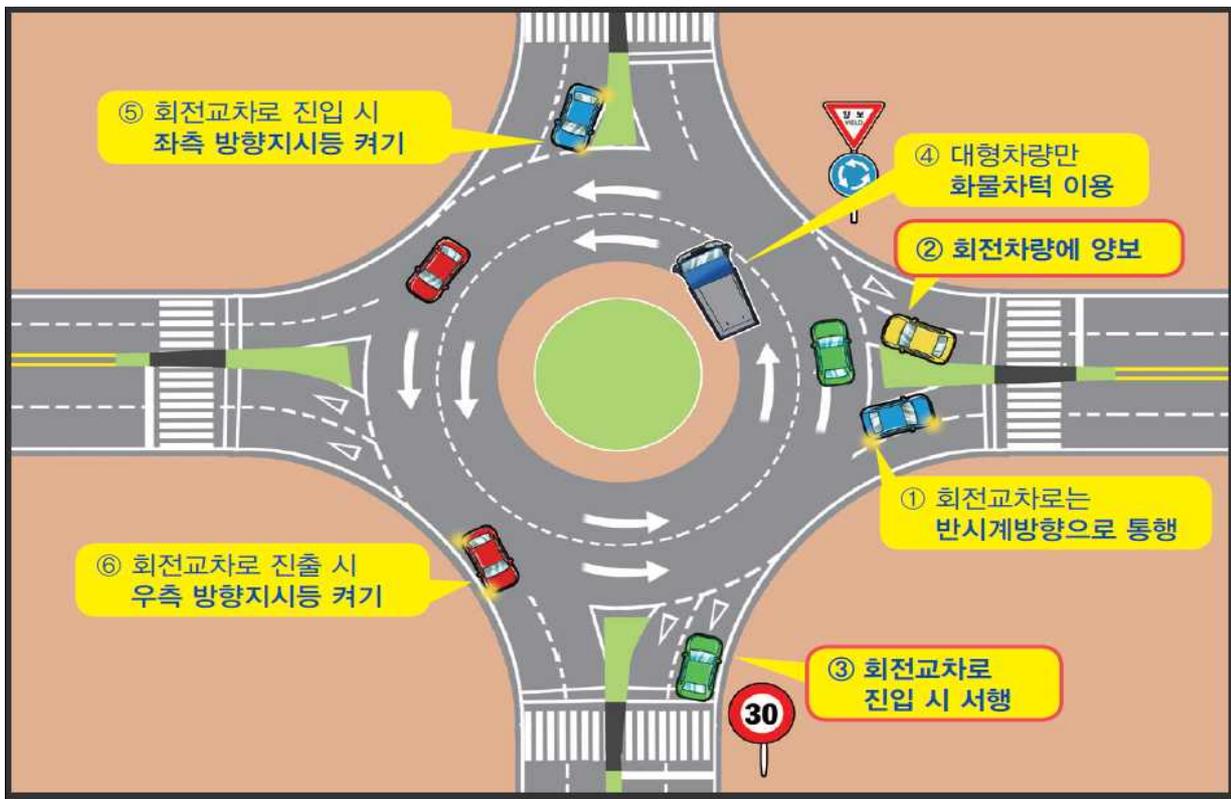
□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하반기에도 교통사고가 잦은 전국 40곳의 생활권 주요교차로를 선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개선대책을 수립, 교통소통 향상은 물론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회전교차로 안전한 통행방법

(도로교통공단, 033-749-5212)

- 회전교차로 구간에서 통행우선권은 어느 차량에게 있을까?
- 혼잡한 시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회전교차로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회전교차로의 안전수칙을 제대로 몰라 교통사고를 내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순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국 각지에서 회전교차로 설치가 연평균 8.1%씩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발생률은 2013년 593건에서 2016년 846건으로 연평균 12.6%씩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로 15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1,253명이나 됐다.
-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부터 국내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회전교차로는 2016년말 기준으로 제주 95곳과 경기 45곳, 서울 29곳 등 전국 각지에 총 461곳이 설치되어 있다.
-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마련된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돌며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 통행하는 도로 운영체제로 지난 1960년대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으므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 경우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 공회전으로 소모되는 연료와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다 교차로(로터리)보다 무리한 꼬리물기, 끼어들기, 차선변경 등으로 인한 차량 간 접촉 사고 및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국내에서도 회전교차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으나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이 진입차량보다 회전차량이 우선이고 진입부 및 교차로 내에서 감속운행, 진출 시 방향지시등 작동 등 안전수칙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운전자의 회전교차로에 대한 인식개선과 운전행태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진입 시 교차로 내부의 회전 중인 자동차가 있으면 반드시 양보 선에 정지했다가 서행으로 진입해야 하고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 또한, 회전교차로 진출 시 우측방향지시등을 켜서 후방 회전차량에게 미리 신호를 보내야 한다. 만약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는다면 후방 회전차량은 전방에 있는 차량이 계속 회전구간을 통행하는 것으로 인식해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회전교차로가 헛갈려 진입 시 시계방향으로 통행하면 역주행이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회전교차로에서 안전한 통행방법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8월 한 달간 집중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 등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시 「동시 보행신호」 운영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 02-700-5110)

-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은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오는 8. 21.부터, 82개 교차로 횡단보도에, 어린이 등교시간(08:00 ~ 09:00)에 한해, “동시 보행신호 (All-Green, All-Red)”를 운영할 계획이다.
- 동시 보행신호는 ‘교차로에 있는 모든 횡단보도에 녹색신호를 동시에 부여하고, 차량을 모두 정지’시켜, 횡단보도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운영 방법이다.
- 최근 5년(2012 ~ 2016년) 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붙임 참조),
  - 어린이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총 457건(연평균 90건) 발생하였고, 이중 248건인 54.3%가 도로횡단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운영하는 방향별로 각각 등화되는 보행신호는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보지 않고 녹색신호만 보고 뛰어가는 어린이 행동 습성에 맞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2회 횡단이 불가피할 경우 다음 신호를 기다리지 못해 무단횡단하거나 가로질러 뛰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 도로교통법 규정상 진행을 완전하게 차단하기 어려운 우회전 차량<sup>1)</sup> 또는 비보호 좌회전<sup>2)</sup> 차량과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통학지도시 차량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 차량 신호등 적색의 등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2)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 비보호 좌회전 표지 :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 도로교통공단, 경찰서와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나 이에 근접한 교차로 중 시범운행을 거쳐 개선 시 교통정체가 극심하거나, 효과가 적을 곳은 제외하고 82개소를 선정하였다.
- “동시 보행신호”는 초등학교 등교시간인 08:00 ~ 09:00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2회 횡단하던 곳은 한번에 건널 수 있도록 보행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예정이다.
- 개선 후 효과가 큰 곳은 계속 운영하고, 필요한 곳은 24시간 전일제로 확대하는 한편, 차량 정체를 줄이기 위해 주변 교차로와 신호 연동시간 등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 서울지방경찰청은 2회에 건너던 횡단보도를 1회에 건널 수 있게 되어 보행이 더 편리해짐과 동시에,
  - 어린이들이 교통위험에 노출되는 시간과 횡단 중 접근차량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은 물론 등굣길 통학지도의 효율성도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